

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3.9.7 시행)

01.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답] ⑤ ⑤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이다.

■ 조직의 구조변수간 관계

구분	규모	기술 (일상)	환경 (불확실)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 2013 선행정학 p. 653

☞ 2014 선행정학 p. 302

02.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가능성 증대
-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답] ①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시장기법의 부분별한 유입으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①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 (OECD)

- ①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
- ② 재정적 압박: 효율성에 치중
- ③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
- ④ 결정론 지향적 환경변화: 성과만을 중시하는 행정
- ⑤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공직에 대한 열망과 신뢰 저해
- ⑥ 정치적 후원 증대: 행정과 정치의 인터페이스가 증대하면서 하위직은 기업논리,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분절

☞ 2013 선행정학 p. 135

☞ 2014 선행정학 p. 84

03.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조직집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답]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의 존성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 2013 선행정학 p. 513

☞ 2014 선행정학 p. 288

04.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답] ③ ③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개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 관점의 정책 개념에 해당한다(D.Easton).

☞ 2013 선행정학 p. 276

☞ 2014 선행정학 p. 154

05.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 ④ 포터(L.Porter)와 톨러(E.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 ⑤ 매슬로우(A.H.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답] ④만 옳다. 포터(L.Porter)와 톨러(E.Lawler)는 Vroom이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여부를 주요변수로 삼아 Vroom의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따르면 보수는 위생요인이다.
- ②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욕구이론이다.
-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 ⑤ 매슬로우(A.H.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 2013 선행정학 p. 494

☞ 2014 선행정학 p. 273

06.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 ① 정책창안
- ② 정책종결
- ③ 정책유지
- ④ 정책승계
- ⑤ 정책전환

[답] ④ 설문은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혁신	새로운 정책의 형성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이나 정책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경되는 것
정책유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기구, 인력 등 정책수단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정책종결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이 폐지되는 것

☞ 2013 선행정학 p. 431

☞ 2014 선행정학 p. 254

07.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 ② 이해 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 ④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답] ②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여과장치(예: 행정계층)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13 선행정학 p. 638

☞ 2014 선행정학 p. 350

08.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답] ① ①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
- ⑤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 2013 선행정학 p. 109

☞ 2014 선행정학 p. 68

09.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 ② 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답] ③ ③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의사결정자의 만족수준에서 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만족모형과 관련된다. 나머지는 모두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이 전제조건이다.

☞ 2013 선행정학 p. 354

☞ 2014 선행정학 p. 204

10.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답] ②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 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 2013 선행정학 p. 222

☞ 2014 선행정학 p. 139

11.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r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 ③ 이로온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답] ④ ④만 옳은 지문이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성과물의 사용에 따른 대가는 예산총계주의(예산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① 원가절감 등 재정정보 제공은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더 유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re tax)라기보다는 단일세율 구조를 갖는데다가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역진세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 ③ 이로온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 ☞ 2013 선행정학 p. 901
 ☞ 2014 선행정학 p. 480

1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답] ① ①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② PPBS의 특징이다.
- ③ 품목별예산의 특징이다.
- ④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이므로 예산의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
-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통제가 곤란하다.

■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내부통제 합리화 (행정부 협실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국민 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의회통제/재정통제 곤란 ·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 단안적·합리적 검토 곤란(합리모형 X) · 점증주의 초래

☞ 2013 선행정학 p. 949
 ☞ 2014 선행정학 p. 512

13.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

해야 한다.

- ③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답] 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 요소간 수평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⑤의 경우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2013 선행정학 p. 46
 ☞ 2014 선행정학 p. 28

14.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답] ②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상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 등 신축적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 2013 선행정학 p. 570
 ☞ 2014 선행정학 p. 316

15. 라이트(D.S.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관계이다.
-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답] ⑤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① 대립형은 라이트가 제시한 모형이 아니다.
- ②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③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④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이다.

■ D.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조정권위형 (Coordinate Authority Model)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독립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시정부)간의 관계는 포괄적 권위모형에 해당한다.
포괄권위형 (Inclusive Authority Model)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간 관계가 모두 수직적 예측관계이다.
중첩권위형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이다.

☞ 2013 선행정학 p. 1092
 ☞ 2014 선행정학 p. 618

16.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답] ④ 다원주의에서는 지배계층이나 관료의 역할보다는 이익집단 등 외부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 2013 선행정학 p. 295
 ☞ 2014 선행정학 p. 169

17.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문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문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답] ② ②가 가장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의 보수결정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013 선행정학 p. 816
 ☞ 2014 선행정학 p. 440

18.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답] ①만 옳다.
 ②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③ 국가공무원은 국비, 지방공무원은 지방비로 보수재원 충당
 ④ 단제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무직 지방 공무원은 선출직이므로 국회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2013 선행정학 p. 1232
 ☞ 2014 선행정학 7급 p. 130

19.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 ④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는 공동재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남·북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50%를 특별시가 확보하여 25개 자치구의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제도도입을 둘러싸고 강남·북구간 갈등을 초래하였고(④), 자신의 사무는 자신의 재정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 본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며(②),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의 재원을 흡수하여 다시 하급정부에 교부해준다는 점에서 과거의 지방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⑤).

☞ 2013 선행정학 p. 1249
 ☞ 2014 선행정학 p. 653

20.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답] ② ②만 옳다.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기능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품목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정책사업),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이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⑤ 세항과 목 모두 행정과목이다.

■ 우리나라의 세출 예산과목(기본)

입법과목			행정과목		
소관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분야	부문	프로그램 (정책사업)	단위사업	

☞ 2013 선행정학 p. 906

☞ 2014 선행정학 p. 483